

## 자원봉사와 기부에 관한 다층적 영향요인 연구

- 지역 공공복지 지출규모와 개인특성 요인을 중심으로 -\*

정진경<sup>+</sup>

(광운대학교)

송정안

(광운대학교)

### [요약]

본 논문은 개인수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지역수준의 공공복지 지출규모가 개인의 자원활동(자원봉사 및 기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층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을 위해 37,648명의 개인자료와 16개 광역자치단체 자료에 대해 위계적 선형모형(HLM)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개인특성에 해당하는 성별, 나이, 경제활동, 소득수준, 교육수준 요인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난 반면 지역의 공공복지지출 규모는 개인의 자원봉사와 기부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복지와 자원활동의 관계에 대한 이론 및 정책적,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주제를 제언하였다.

주제어: 공공복지, 자원봉사, 기부, 위계적 선형모형

### 1. 서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와 물질적 기여를 하는 기부와 같은 개인의 자원활동은 복지국가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복지와 관계하여 왔다. 최근의 복지국가 재편의 맥락에서 국가복지 자원의 한계를 인식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개별 시민의 자발적 기여를 촉진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은 자원봉사와 기부 영역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옮겨가게 했다(Alcock, 2010; Eliasoph, 2011; Smith, 2010).

\* 이 논문은 2014년도 광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주저자.

서구의 복지국가 발전과정과 달리 국가복지 수준과 개인의 자발적 참여수준 모두가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로서는(정진경, 2014) 그 고민이 더 깊다 할 수 있다.

자원봉사와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기존 국내외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자원봉사·기부 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주로 개인수준에서 찾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향의 연구들은 나이, 성별, 경제적 수준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관계를 분석해 왔다. 둘째, 복지국가 맥락에서 공공복지지출이 자원활동에 의해 축적되는 자원의 양, 즉 자원봉사와 기부 총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정부의 복지공급이 증가할 경우 민간 자원활동의 위축 혹은 증가 경향을 구축·구인효과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몇몇 논의들은 공공복지가 개인의 자원봉사·기부 참여 정도에 다층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하고 있으며, 지역변수를 기존 자원봉사·기부연구에서 지배적으로 다루어져온 개인특성 요인과 함께 분석하기 시작했다(Shulz and Halfiger, 2007; Stadelmann-Steffen, 2011).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한정된 자원 하에서 무조건적이고 일률적인 공공복지 증가 혹은 축소가 아닌, 정책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분화되고 조건화된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한 개인의 행위가 다층적 환경에 놓여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층분석연구는 개인수준과 환경요인이 각기 다른 모델로 분석되던 연구들보다 설명력이 더 높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로의 복지재정 부담증가가 가속화되는 추세 속에 지역의 전반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는 맥락(박희봉, 2006)을 고려할 때 개인의 자원봉사와 기부에 대한 다층분석은 매우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한 반면 현실적으로는 자원봉사와 기부 수준의 지역별 격차가 실재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지적된다. 그러나 지역수준에서 공공복지와 개인의 자발적 자원 제공(자원봉사·기부)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시도는 아직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수준의 공공복지 지출 규모가 개인특성과 함께 개인의 자원봉사 및 기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37,648명의 개인자료와 16개 광역 시도 지역자료에 대한 다층모형을 구성하고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적용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1) 공공복지와 민간 자원활동의 관계

사회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로서 여겨졌던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확장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영역인 자원섹터는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Kidd, 2002). 그러나 복지국가 발전에 따른 공공복지의 팽창에 관한 이론들에 비해 복지국가 재편

의 논리에서 나타난 민간영역의 자원활동에 대한 설명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다만 다양하게 나타나는 공공복지와 민간 자원활동 간의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 흐름들 중 하나의 예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구축(crowd-out)·구인(crowd-in) 효과이론이다(Heutel, 2014).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기제는 복지자원 총합을 고려하는 개별 시민들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정부가 복지공급을 증가시킬수록 이미 자신은 세금을 통해 사회문제에 기여했다고 간주함으로써 별도의 자발적인 추가적 기여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다(Weisbrod, 1975; Warr, 1982; Roberts, 1984).

Payne(2009)은 메타분석을 통해 공공지출의 증가는 서비스나 재원을 제공하는 개인들의 자발적 활동을 감소시키고 대체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Simmons과 Emanuele(2004) 역시 미국 자료를 대상으로 주와 지방정부의 공공복지지출 증가가 해당 지역의 자원봉사와 기부참여를 감소시켰다는 분석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구축효과는 일부 이론적 비판 및 이론과 실증연구 결과 사이의 부정합성 측면에서 대안적 설명이 요구되어 왔다(Heutel, 2014). 구인효과 이론(crowd-in effect)은 이러한 틈새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늘어나는 공공복지가 오히려 민간활동을 촉진하여 증가시킬 것이라는 설명을 제공한다. 구축효과가 복지재원의 총량에 근거한 균일한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과 효용에 대한 것이라면 구인효과는 재원의 총량이 아닌 공공복지의 자원재분배 효과에 의한 집단별 효용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Bekkers and Wiepking, 2011). 이는 공공복지가 증가할수록 시민들에게 자원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증가하게 되어 직접적인 기부를 비롯한 다양한 자원활동 역량과 기회들을 증가시켜 가게 된다는 관점이다(Larsen, 2007; Bekkers and Wiepking, 2011). 또한 구인효과는 공공복지 지출의 양상이나 흐름이 민간활동에 신뢰할 수 있는 인증 혹은 시그널로 작용하여 정부의 공공복지 공급의 방향을 따라 민간자원의 공급이 유인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Payne, 2001; Andreoni, 2006; Heutel, 2014).

그러나 최근 몇몇 실증 연구들은 구축효과와 구인효과가 반드시 배타적으로 나타난다기보다는 발현되는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Stadelmann Steffen, 2011; Anderoni et al., 2014; Heutel, 2014). 특히 Stadelmann Steffen(2011)은 다층분석을 적용하여 23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공공복지 공급과 시민 개개인의 자원봉사활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공공복지지출은 개인의 자원봉사활동에 구축효과를 나타냈다. 비록 시계열 분석을 통한 엄밀한 의미의 구축효과를 실증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자원봉사활동 정도에 미치는 공공복지지출 수준의 효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는 공공복지와 자원활동 간의 관계를 개인수준에서 공공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자원활동 참여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된 바 있다(오단이·김사현, 2012). 그 외에 공공복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실증분석은 부재한 상황이며 개인의 자원활동을 다층적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공공복지가 개인의 자원활동에 미치는 연구에 있어 객관적 실증 데이터를 활용한 다수준(multi-level) 분석이 요구된다.

## 2) 지역의 공공복지 지출규모와 자원봉사·기부의 관계

공공복지와 개인의 자원활동 간 다층적 관계성은 한정된 자원 하에 복지 자원의 획득과 운용의 효율성을 보다 극대화하고 정부와 민간 간 최적의 효율적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은 국가마다 상이한 복지재정 부담 구조에 따라 공급주체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의미와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의 전반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는 한편(박희봉, 2006), 2005년부터 사회복지사무가 본격적으로 지방이양 되면서 사회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복지 공급이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최성은, 2013; 안영진, 2014). 최근 영유아보육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 비중도 유래없이 증가하는 등 공공복지 공급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커지고 있다.

공공복지공급의 분권구조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지출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 왔지만, 지역 간의 복지재정 불균형 해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원 마련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박고운·박병현, 2007). 허능식과 신두섭(2014)에 의하면,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는 노령인구, 빈곤가구, 장애인 비율 증가로 향후 10년간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 예측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상우(2014)는 복지재정의 강한 비가역적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보다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재정 부족을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은 실제적으로는 매칭펀드로 인해 더 큰 재정적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최순영, 2014).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보완해 가기 위한 수단으로 자원봉사나 기부와 같은 지역주민의 자원활동이 가능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복지 공급 책무와 재정 문제는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이들과의 공공서비스 공동생산 혹은 민간자원의 조달이 매우 중요해지는 맥락을 제공한다.

그러나 공공복지 재정이나 경제수준의 지역 불균등이 심한 가운데, 이를 보충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율 또한 지역마다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표 1〉 참조).

아직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공공복지 지출규모와 개인 자원활동 참여수준의 관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국내연구는 없다. 그러나 구축·구인효과 이론과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자원봉사·기부 참여의 지역별 차이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제공되는 공공복지 지출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지역 수준의 공공복지 지출규모가 개인의 자원활동 참여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Shulz와 Halfiger(2007)는 스위스 지방정부 수준에서 복지비 지출규모가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분석한 바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복지 지출 수준과 함께 자원봉사·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의 특성들은 어떤 것일 수 있는지 다음에서 검토한다.

〈표 1〉 광역자치단체별 공공복지지출 및 자원봉사·기부 참여율(2013)

지역	비율 (%)			순위 (내림차순)		
	공공복지지출비율	자원봉사참여율	기부참여율	공공복지지출비율	자원봉사	기부
서울	32.13	15.8	36.5	광주	대전	대전
부산	35.56	16.6	44.8	대전	경남	부산
대구	36.43	16.5	35.6	대구	제주	충북
인천	32.71	16.2	36.5	부산	광주	광주
광주	39.01	21.2	39.0	인천	충남	인천
대전	38.38	22.4	47.1	서울	전남	서울
울산	26.85	18.8	31.8	울산	충북	대구
경기	21.42	17.5	30.3	경기	울산	경남
강원	26.52	17.2	30.2	충북	경기	전남
충북	20.22	19.5	40.4	전북	강원	전북
충남	24.44	21.1	31.6	경남	부산	울산
전북	20.65	15.5	32.0	경북	대구	충남
전남	23.62	19.8	34.1	충남	경북	경기
경북	18.31	16.5	26.0	강원	인천	강원
경남	20.75	21.6	34.1	전남	서울	제주
제주	23.02	21.5	29.2	제주	전북	경북

자료: 공공복지지출 비율-행정자치부 재정고, 자원봉사·기부 참여율-2013 사회조사 원자료 (통계청)

### 3) 개인특성이 자원봉사·기부에 미치는 영향

정책적으로 정부와 비영리섹터 모두 기부자와 자원봉사자 프로파일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국가적 통계조사나 정부 발표들이 지속적으로 발간되는 가운데, 자원봉사와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요인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결과들은 성별, 나이, 교육수준, 경제적 여건, 취업상태 등이 자원봉사나 기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박태규 외, 2008; 구지윤 외, 2011; 강철희 외, 2012; Bekkers and Schuyt, 2008; Mesch et al., 2006).

그런데 참여하는 개인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들이 자원봉사나 기부에 미치는 영향은 방향성과 정도에 있어 일관되거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성별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기부나 자원봉사 참여율이 다르다는 연구들(김태홍 외, 2007; 김성경, 2009; 구지윤, 2013; Andreoni et al, 2003; Mesch et al., 2006)이 있는 반면, 성별의 차이가 자원봉사 참여율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Lee and Chang, 2007)도 있다.

나이 역시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 양상을 다변화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자원봉사의 경우, 나이는 자원봉사 빈도와 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강철희, 2003), 나이가 적을수록 자원봉사 참여영역이 다양해질 수 있다(구지윤 외, 2011). 그러나 자원봉사의 참여정도에 나이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성경, 2007). 박태규 외(2008)에서는 나이가 기부회수와 정의 영향 관계로 나타난 반면, 강철희(2003)와 홍은진(2005)에서는 나이가 기부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경제활동 여부나 소득수준은 자원봉사·기부 활동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부부는 소득수준과 정의 영향관계를 형성하며(박태규 외, 2008; Mesch et al, 2006), 소득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Wilson, 2000; Stadelmann- Steffen, 2011). 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거나(김태홍 외, 2007; Lee and Chang, 2007), 소득수준과 기부는 비선형적 관계로서 중위 소득수준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과 높은 소득수준에서 참여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James and Sharpe, 2007).

소득수준과 더불어 경제적 활동 여부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김태홍 외(2007)는 미취업자가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임금근로자, 자영업 등의 비임금근로자)보다 참여결정 확률은 높았으나 참여시간 기여 정도에서는 미취업자보다 비임금근로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Apinunmahakul 외(2009)에서는 경제활동 중인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강철희 외(2012)는 취업 상태가 자원봉사와 기부활동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경제활동 여부는 자원봉사에만 참여, 기부에만 참여, 기부·자원봉사에 모두 참여, 어느 것에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 간에 유의미한 참여 정도의 차이를 낳고 있었다.

교육수준도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요인으로 여겨진다. Bekkers와 Wiepking(2011)과 Lee와 Chang(2007)은 교육수준이 기부·자원봉사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분석하였지만, Stadelmann-Steffen(2011)은 자원봉사에 대해서 교육수준은 부의 관계로 나타났고, 강철희 외(2012)에서는 교육수준이 다른 자원활동 참여형태에 비해 기부에만 참여하는 경우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김태홍 외(2007)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아지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기부 참여를 개인수준의 변수에서만 접근하는 연구들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복지국가 맥락에서 정부와 개인의 자원활동 관계를 조망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 국가 내에서 지역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날 뿐 아니라(Shulz and Halfliker, 2007), 공공복지 지출 규모가 개인의 자원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특성에 따라 단일하지 않은 양상으로 발견(Stadelmann-Steffen, 2011)되는 새로운 연구결과들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자원활동이 개인특성과 개인이 속한 집단의 공공복지지출 수준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 나이, 경제활동여부, 소득수준, 교육수준을 개인특성변수로 설정하며 이들 변수들이 지역수준의 공공복지 지출 규모와 함께 개인의 자원봉사와 기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연구설계

#### 1) 분석자료 및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분석의 목적은 지역의 공공복지 지출수준과 개인특성이 개인의 자원봉사 및 기부행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와 기부는 2013년도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각각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시간(hour)'과 '지난 1년간 현금으로 기부한 총 액수(원)'로 측정되었다. 본 자료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총 37,648명을 표본으로 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는 16개 시도별로 주택유형과 농가비율을 따라 층화된 가구표본에 대해 가구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방법(systematic selection with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을 이용하여 표본조사구를 추출한 후 이에 대해 무작위로 조사대상 가구를 추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만 13세 이상 상주가구원에 해당하는 개인이다.

개인 수준의 독립변수인 성별, 나이, 소득수준, 경제활동 여부 및 교육수준 자료 역시 2013년도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나이를 제외한 이들 개인 변수는 모두 범주형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 성별은 남성과 여성,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과 이상<sup>1)</sup>, 경제활동 여부는 지난 1개월간 경제활동 여부, 교육수준은 대졸 미만과 이상으로 더미 변수화하였다. 나이는 원 자료의 연속변수가 제공하는 정보량을 유지하기 위해 그대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지역 수준의 독립변수인 공공복지 지출 규모는 2012년 기준 안전행정부 재정고 자료의 '사회복지비' 항목을 활용하여, '인구 1인당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복지 지출'로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사회복지비'란 세출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에 해당하는 결산액을 의미한다.

지역수준 통제변수로는 광역자치단체별 경제규모(1인당 지역총생산량), 인구밀도가 투입되었다. 지역경제규모는 자원활동을 통해 기여되는 자원의 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구밀도 역시 자원활동 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Musick and Wilson, 2008; Kim and Kim, 2014)를 토대로 통제될 필요가 있다. 경제규모와 인구밀도 통제변수는 통계청 KOSIS 자료를 참고하였다.

1) KOSIS에 따르면 2012년 전체 가구의 월평균가구소득은 평균 3,556,390원에 해당한다.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는 100만원 단위로 월평균가구소득을 서열척도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평균에 근접하면서 중위수준을 고려한 3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표 2〉 변수의 측정방법 및 출처

변 수		측정 문항	자료
독립 변수	지역 수준	지역 인구 1인당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백만원) ※ 통제변수 : 경제규모 (1인당 지역총생산량GRDP, 천원) 인구밀도 (인구/지역면적km <sup>2</sup> )	안전행정부 재정고 (2012)  통계청 KOSIS (인구관련: 2012 추계)
	개인 수준	성별 (0=남자, 1=여자) 나이 (연속변수) 소득수준 (0=월평균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300만원 이상) 경제활동 (0= 지난 1개월 간 경제활동 유, 1=지난 1개월 간 경제활동 무) 교육수준 (더미변수: 0=대졸미만, 1=대졸이상)	2013 사회조사 (통계청)
종속 변수	자원봉사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시간 (자연대수값)	2013 사회조사 (통계청)
	기 부	지난 1년간 기부금액 (자연대수값)	

## 2)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위계적 선형 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활용하였다. 위계적 선형 모형(HLM)은 집단차원과 개인차원의 변수들이 함께 분석단위에 포함되는 내포된 데이터(nested data) 혹은 위계적 데이터(hierarchical data)에서 층위가 다른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다층분석방법이다(Raudenbush and Bryk, 2002). 본 연구의 데이터는 집단수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복지 지출규모와 개인수준에서의 인구학적 특성이 포함된 전형적인 위계적 내포 데이터에 해당한다.

### (1) 기초모형

기초모형은 독립변수 투입 없이 개인의 자원봉사와 기부 정도에 지역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무조건 평균 모형(unconditional mean model)이다. 기초모형은 개인수준 및 지역수준의 독립변수가 포함되는 다음 단계의 연구모형과 비교하기 위한 분산과 오차정보를 제공해준다.

$$Y_{ij} = \gamma_{00} + u_{oj} + r_{ij}$$

$Y_{ij}$  = j집단 개인의 자원봉사/기부 정도

$\gamma_{00}$  = 전체 집단의 자원봉사/기부 평균

$u_{oj}$  = 집단 간 자원봉사/기부 오차

$r_{ij}$  = 집단 내 자원봉사/기부의 오차



##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지역수준의 독립변수가 절편에 투입되는 무선절편 모형(random intercept model)이다. 이는 개인특성과 지역공공복지 지출이 지역에 속한 개인의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층적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모형에는 지역수준에서 지역경제규모와 인구밀도라는 통제변수가 함께 투입되었다. 한편, 모든 독립변수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회귀계수 값에 대한 용이한 해석을 위해 전체평균중심화(grand-mean centering)를 실행하였다.

Level 1 : 개인수준

$$Y_{ij} = \beta_{0j} + \beta_{1j} * (\text{성별}) + \beta_{2j} * (\text{경제활동}) + \beta_{3j} * (\text{교육수준}) + \beta_{4j} * (\text{연령}) + \beta_{5j} * (\text{소득수준}) + r_{ij}$$

Level 2: 지역수준

$$\beta_{0j} = \gamma_{00} + \gamma_{01} * (\text{공공복지지출}) + \gamma_{02} * (\text{지역경제규모}) + \gamma_{03} * (\text{인구밀도}) + u_{0j}$$

〈연구모형〉 무선 절편 모형

$$Y_{ij} = [\gamma_{00} + \gamma_{01} * (\text{공공복지지출}) + \gamma_{02} * (\text{지역경제규모}) + \gamma_{03} * (\text{인구밀도}) + \gamma_{10} * (\text{성별}) + \gamma_{20} * (\text{경제활동}) + \gamma_{30} * (\text{교육수준}) + \gamma_{40} * (\text{연령}) + \gamma_{50} * (\text{소득수준})] + u_{0j} + r_{ij}$$

## 4. 분석결과

### 1) 기술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다음 <표 3>과 같다. 개인수준 자료의 사례수는 37,648 명이며 모든 변수에 대해 결측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수준의 독립변수인 성별에 있어 남성이 47.5%, 여성은 52.5%이며, 평균연령은 45.93세이다. 지난 1개월 동안 경제활동을 한 비율은 56.7%,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비율은 43.3%이며, 대졸 이상 30.1%, 대졸 미만은 69.9%이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300만원 미만이 61.0%, 300만원 이상은 39.0%이다.

지역수준 사례수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이며 결측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공공복지 지출 규모(지역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는 평균 1.02백만원이며, 최대 1.45백만원(전남), 최소

0.55백만원(제주)으로 나타났다. 평균 인구밀도는 2,261.33명이었으며, 최대 16,501.57명(서울), 최소 89.25명(강원)이었다. 1인당 지역총생산량(GRDP) 평균은 28,494.01천원이고, 최대 60,423.73천원(울산), 최소 18,146.18천원(대구)이었다.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자원봉사 시간은 평균 4.96시간이며 최소 0시간, 최대 12,000시간을 나타냈다. 기부액의 경우 평균 63,189.39원이었으며 최소 0원, 최대 20,000,000원을 보였다.

위계선형분석에 있어 종속변수의 정규성 충족이 중요하므로 자원봉사 시간과 기부액에 대해 왜도와 첨도 분석을 실행하였다. 자원봉사의 경우 왜도 14.04, 첨도 444.46였고, 기부의 경우 왜도 21.64, 첨도 710.49로 정규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규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 값을 자연대수값(ln)으로 변환하였으며 그 결과 자원봉사(ln)는 왜도 2.10, 첨도 3.35, 기부(ln)는 왜도 .85, 첨도 -1.12로, 왜도 절대값 3과 첨도 절대값 8의 범위 안에 있어 비정규성의 문제가 완화되었다.

〈표 3〉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종속변수> (N=37,648)				
자원봉사시간	4.96	20.60	0	1,200
기부금액	63,189.39	36,824.21	0	20,000,000
<1수준:개인> (N=37,648)				
성 별(0=남자, 1=여자)	.53	.50	0	1
연 령(연속형)	45.93	18.71	13	103
교육수준(0=대졸미만, 1=대졸이상)	.30	.46	0	1
경제활동 (0=유, 1=무)	.57	.50	0	1
가구소득(0=300만원미만, 1=300만원이상 )	.39	.49	0	1
<2수준:지역> (N=16)				
공공복지지출 (백만원)	1.02	.24	.55	1.45
인구밀도 (명/k㎡)	2261.33	4044.73	89.25	16501.57
지역경제규모 (천원)	28494.01	10897.16	18146.18	60423.73

〈표 4〉 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자원봉사시간	1									
2.기부금액	.200**	1								
3.성 별	-.003	.088**	1							
4.연 령	-.288**	-.041**	.047**	1						
5.교육수준	.006	.010*	-.005	-.024**	1					
6.경제활동	.141**	-.180**	.215**	-.036**	-.002	1				
7.가구소득	.005	-.006	.006	.016**	-.271**	-.003	1			
8.공공복지지출	-.007	.003	.011**	.112**	-.055**	-.026**	.030**	1		
9.인구밀도	-.017**	.032**	.0002	.001	.019**	.040**	.012*	-.423**	1	
10.지역경제규모	.004	-.033**	-.005	-.070**	.009	-.011**	-.025**	-.164**	.022**	1

## 2) 위계적 선형(HLM) 분석 결과

### (1) 기초모형 분석결과

기초모형 분석을 통해 집단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와 지역수준 오차분산( $u_0$ )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여 위계적 선형모형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표 5〉 참조). 자원봉사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결과, ICC 값은 0.003으로 이는 광역자치단체 특성이 개인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의 0.3%를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수준 오차분산인  $u_0$ 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X^2=112.78$ ,  $p < .001$ ). 기부에 대한 ICC 값은 0.01로 이는 광역자치단체 특성이 개인의 기부액 정도의 1%를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수준 오차분산인  $u_0$ 에서도 역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X^2=393.97$ ,  $p < .001$ ).

ICC는 대체로 .05 이상이면 자료가 위계적 특성이 있다고 해석의 경향이 있다(Hox, 2010). 그러나 ICC는 자료의 다층성을 평가하는 값이라기보다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정보이며 표본크기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낮다고 해서 다층분석이 필요없다는 의미는 아니다(홍세희, 2015). 또한 ICC가 작더라도 집단 간 변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가 있는 등 이론적 필요성에 의해 다층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Heck and Thomas, 2009. 송태민·송주영, 2013:15에서 재인용). 이에 본 연구는 기초모형 분석 결과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지역수준 변이가 비록 크지는 않지만, 기존 연구들에 이은 한국적 맥락에서의 복지지출 수준과 민간복지 기여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주목하며 다음의 연구모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5〉 기초모형 분석결과

	자원봉사			기부		
	계수	표준오차	t 값	계수	표준오차	t 값
절편 ( $\gamma_{00}$ )	0.53	0.02	31.10	3.51	0.14	25.96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X^2$	표준편차	분산	$X^2$
개인수준 ( $r_{ij}$ )	1.14	1.30	-	5.09	25.93	-
지역수준 ( $u_0$ )	.07	0.01	122.68***	0.53	0.28	393.97***
ICC	0.003			0.01		
Deviance (-2LL)	116896.092			229447.112		

\*\*\*  $p < .001$

### (2) 자원봉사·기부에 대한 다층요인 분석결과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독립변수가 개인의 자원봉사시간과 기부액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한 다층분석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먼저 연구모형의 적합도에 있어 모형의 부적합도를 나타내는 Deviance값과 지역수준의 오차 분산이 자원봉사, 기부 각각 기초모형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여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설명력이 기초 모형에 비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원봉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투입된 개인특성 변수들은 모두 자원봉사시간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안하는 사람이,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젊은 연령일수록 연간 자원봉사시간이 길었다. 그러나 지역수준 독립변수인 지역의 공공복지지출 규모는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속한 개인의 자원봉사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수준의 통제변수인 지역경제규모와 인구밀도 역시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표 6> 자원봉사·기부에 대한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결과

구 분	자원봉사		기부	
	계 수	표준오차	계 수	표준오차
절 편 ( $\gamma_{00}$ )	.053***	.018	3.553***	.131
개인수준 (N=37,648)				
성별 ( $\gamma_{10}$ )	-.056(-.024)**	.014	-.526(-0.051)***	.108
경제활동 ( $\gamma_{20}$ )	.294(0.127)***	.020	-1.224(-0.118)***	.103
교육수준 ( $\gamma_{30}$ )	.215(0.086)***	.021	-1.991(-0.178)***	.128
연령 ( $\gamma_{40}$ )	-.017(-0.277)***	.0007	.008(0.029)*	.003
소득수준 ( $\gamma_{50}$ )	.215(0.091)***	.019	1.758(0.167)***	.112
지역수준 (N=16)				
공공복지 지출 규모 ( $\gamma_{01}$ )	-.110(-0.022)	.061	.717(0.033)	.369
지역경제 규모 ( $\gamma_{02}$ )	-.0000001(-0.0009)	.000001	-.00002(-0.042)*	.000007
인구밀도 ( $\gamma_{03}$ )	-.000004(-0.014)	.000003	.0001(0.079)***	.00001
개인수준분산 ( $r_{ij}$ )	1.151 / SD=1.073		23.029 / SD=4.798	
지역수준분산 ( $u_0$ )	.005 / SD=.071		.265 / SD=.515	
Deviance (-2LL)	112262.865***		225085.094***	

\*\*\* p<.001, \*\* p<.01, \* p<.05. ( ) 안은 표준화계수.

다음으로 기부 분석결과에 따르면, 투입된 개인특성 변수들은 모두 기부금액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에 비해 남성이, 경제활동 하는 경우, 대졸 미만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간 기부액이 많았다(<표 6> 참조). 그러나 지역수준 독립변수인 지역의 공공복지지출 규모는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속한 개인의 기부액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원봉사에 대한 분석 결과와 달리 지역수준의 통제변수인 지역경제규모와 인구밀도는 개인의 기부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개인이 속한 지역의 1인당 지역총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개인의 기부액은 매우 미미한 정도로 감소하였다. 지역의 경제가 성장할수록 기부가 줄어든다는 점은 지역수준의 경제성장이 개인의 기부액 증가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인구밀도

는 증가할수록 개인 기부액이 매우 적은 정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인구밀도가 비영리섹터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뒤집힌 유자형( $\cap$ )으로 나타나는 연구결과들을 고려해볼 때 이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에서 기부액은 아직 인구밀도 증가에 의한 감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Kim and Kim, 2014 참조).

#### 4. 결론

본 연구는 개인의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 수준에 대해 개인특성요인과 지역수준의 공공복지 지출규모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위계선형모형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2013년도 기준 전국 만15세 이상 인구의 자원봉사참여율 평균은 17.7%, 기부 참여율은 34.5%인 가운데(보건복지부, 2014),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자원봉사 참여율은 최저 15.5%에서 최고 22.4%의 편차가 나타났으며, 기부 참여율에서도 최저 26%에서 최고 47.1%의 큰 편차를 보였다(〈표 1〉 참조). 개인별 자원활동 참여수준에 있어서도 자원봉사활동 연간 평균 시간은 4.96시간이나 20시간 정도의 높은 표준편차를 보였고, 연간 평균 기부금액은 약 63천원이나 36천원의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다(〈표 3〉 참조).

이러한 개인의 자원활동 참여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주로 개인 특성 요인의 영향력 검증 차원에서 접근하여 왔다면, 본 연구는 지역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가정하여 다층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차별성이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자체 복지비 지출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예산에서 공공복지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저 18%에서 최대 39%의 편차가 나타나는 점(〈표 1〉 참조)에 기반하여, 광역자치단체별 사회복지비 규모가 해당 지역주민 개인의 자원봉사 시간이나 기부금액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광역수준에서의 공공복지지출 규모는 자원봉사활동 시간이나 기부금액 등 개인의 자원활동 참여 수준에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개인의 자원활동 참여 수준은 모두 개인특성요인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특히 개인특성 요인 중 성별에서는 남성이, 소득수준에서는 고소득층이 공통적으로 보다 더 높은 자원봉사 시간과 기부액을 보였다. 반면 경제활동 유무나 교육수준, 연령은 자원봉사시간과 기부액에 대해 서로 다른 방향의 영향을 보였다. 자원봉사 시간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 연령이 낮을수록 보다 더 길었다. 반면 기부액의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대졸 미만의 교육수준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많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추가적 논의점을 이룰 수 있다. 첫째, 국가수준에서의 공공복지총량과 개인수준에서의 자원활동 총량의 관계를 구축 및 구인효과 관점에서 유럽 선진국들의 자료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구축효과를 검증한 해외 연구(Stadelmann-Steffen, 2011; Hackl et al., 2012)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러한 직접적인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복지지출이 개인의 자원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구축 또는 구인이라는 이분법적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개별 국가마다 전혀 관계가 없거나 혹은 상이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나라에서 정부의 공공복지지출 확대를 통한 복지공급 증가의 현상을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자원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인식할 것인지, 만약 인식했다 해도 그것이 실제 자신의 자원활동 참여 변화로 연결될 것인지에 대해 공공복지와 자원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명확히 조사되거나 설명된 바가 없다. 이는 공공복지지출 규모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자원활동 '참여 동기'까지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설명의 한계로 확장되며 아직까지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국내외 연구 역시 발견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지방정부의 공공복지지출 증가의 어려움을 단순히 지역 내 민간 자원 활성화를 통해 대체하고자 하는 정책이 시도된다면 이 역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공공복지 증가를 통해 막연히 복지분야에 개인 자원활동이 모여들 것이라는 기대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와 기부와 같은 자원활동이 갖는 비경제적인 사회적 가치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정부의 공공복지재정을 감축하기 위해서만 개인의 참여가 촉진되지는 않을 것이다(OECD, 2011). 오히려 공공복지의 효율성과 주민의 만족도 향상 및 개인 자원활동 참여자간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공-민간자원의 전략적 결합에 의한 정책적 과제의 발굴이 더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자원활동 참여 수준은 개인특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구사회학적 및 경제적 특성이라는 객관적 요인들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이외에 자원활동 참여 동기와 같은 주관적 개인특성 요인 역시 중요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2차 자료 분석이라는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 자원봉사 및 기부 동기 요인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자원활동의 참여 동기와 같은 주관적 개인특성 요인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와 기부에 대한 다층적 영향요인을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발견한다.

넷째, 자원봉사와 기부에 미치는 개인특성 요인이 중요하게 발견된 가운데 성별과 소득수준은 동일한 방향으로, 나머지 경제활동 유무, 교육수준, 연령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원봉사와 기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자원봉사와 기부가 민간 영역의 자발적 나눔활동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이한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되는 것일 수 있음을 추론케 한다. 자원봉사와 기부와의 관계(참여 여부)에 대한 실증연구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요인들이 많이 축적되었으나(박태규 외, 2008; 구지윤 외, 2011; 강철희 외, 2012; Bekkers and Schuyt, 2008; Mesch et al., 2006), 보다 이론적 차원에서 무엇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에 대한 심층적인 이론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실천적 측면에서도 자원봉사와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요인이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인적 자원 또는 물적자원이 필요할 경우 어떤 인구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동원을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가능케 한다.

본 연구가 갖는 연구방법론적 한계와 향후 연구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분석자료의 특성에 기인한 연구의 한계이다. 2차 데이터를 활용한 본 연구는 지역 수준의 사례수가 16개 광역시도로 개인 사례수에 비해 지나치게 적었다. 또한 보다 엄밀하게 공공복지지출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분석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나 자료의 한계로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자원봉사 및 기부의 세부 영역 자료가 부재하여 지역의 공공복지지출 규모가 세부적인 자원봉사·기부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지 못하였다. 셋째, 한 국가 내 지방정부 수준에서 공공복지지출 규모가 개인의 자원활동 수준에 일방적인 구축 또는 구인관계로

나타나기보다(Shulz and Halfliker, 2007; 정진경, 2014),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구축·구인효과가 다른 양상으로 발견((Stadelmann-Steffen, 2011)된다는 실증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시계열 자료가 축적된다면 본 연구에 이어 공공복지 및 개인특성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다층적 분석모형의 연구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자원봉사 및 기부 참여 동기와 지역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통제변수 역시 향후 분석에서 포함되어야 할 요인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들은 향후 후속 연구 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강철희, 2003, “자선적 기부행동 및 자원봉사 참여행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2(2): 161-205.
- 강철희·유재윤·박소현, 2012, “기부와 자원봉사에의 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누가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누가 결함적으로 참여하는가?” 『한국사회복지학』, 64(2): 273-298.
- 구지윤, 2013, “기부행동의 성별 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7(단일호): 93-122.
- 구지윤·김계정·유재윤, 2011,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영역 선택 행동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영역과 비 사회복지영역 자원봉사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8(단일호): 1-37.
- 김성경, 2007, “우리나라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자원봉사참여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자원봉사정체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1(단일호): 1-20.
- 김성경, 2009, “사회적 자본 요인 및 자원봉사활동 요인이 평균이상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3): 317-337.
- 김태홍·김난주·권태희, 2007, “한국 자원봉사활동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인구학』, 30(3): 83-105.
- 박고운·박병현, 2007,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31(단일호): 423-451.
- 박상우, 2014,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관계의 재정립”, 『지역사회연구』, 22(1): 123-143.
- 박태규·윤병호·정진욱, 2008, “기부횟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학연구』, 1(3): 79-100.
- 박희봉, 2006, “시민참여와 로컬 거버넌스”,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2): 1-23.
- 안영진, 2014, “사회복지정책의 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원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15(2): 53-83.
- 오단이·김사현, 2012, “공공복지와 민간복지활동의 관계에 관한 소연구: 공공복지 인식이 개인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9(2): 61-84.
- 송태민·송주영, 2013, 『빅데이터분석방법론: 구조방정식과 다층모형을 중심으로』,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정진경, 2014, “OECD 국가의 국가복지수준과 민간나눔수준 결합유형에 따른 사회통합의 특성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2(단일호): 131-160.
- 최성은, 2013, “복지재정과 재원조달”, 『재정학연구』, 6(1): 58-95.
- 최순영, 2014, “사회복지재정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8(2): 115-157.

- 하능식·신두섭, 2014.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요변화와 재정전망”, 『경제연구』, 32(1): 207-237.
- 홍세희, 2015, 『위계적 자료분석을 위한 횡단 다층모형』, 서울: 에스앤엠 리서치 그룹.
- 홍은진, 2005, “기부참여와 기부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7(3): 123-152.
- Alcock, P., 2010, *Big Society or Civil Society? A New Policy Environment for the Third Sector*, UK: Third Sector Research Centre.
- Andreoni, J., 2006, “Philanthropy”, 1201-1269, in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Giving, Altruism and Reciprocity*, edited by Kolm, S. and Ythier, J., North Holland.
- Andreoni, J., Brown, E., and Rischall, I., 2003, “Charitable giving by married couples who decides and why does it matter?” *Journal of Human Resources*, 38(1): 111-133.
- Andreoni, J., Payne, A., & Smith, S. (2014). “Do grants to charities crowd out other income? Evidence from the UK”.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14: 75-86.
- Apinunmahakul, A., Barham, V., and Devlin, R. A., 2009, “Charitable giving, volunteering, and the paid labor market”,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8(1): 77-94.
- Bekkers, R., and Schuyt, T., 2008, “And who is your neighbor? Explaining denominational differences in charitable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Netherlands”,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50(1): 74-96.
- Bekkers, R., and Wiepking, P., 2011, “Who gives? A literature review of predictors of charitable giving part one: religion, education, age and socialisation”, *Voluntary Sector Review*, 2(3): 337-365.
- Eliasoph, N., 2011, *Making Volunteers: Civic Life after Welfare’s End*,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ckl, F., Halla, M., and Pruckner, G. J., 2012, “Volunteering and the state”, *Public Choice*, 151(3-4): 465-495.
- Heutel, G., 2014, “Crowding out and crowding in of private donations and government grants”, *Public Finance Review*, 42(2): 143-175.
- Hox, J., 2010, *Multilevel Analysis: Techniques and Applications*, Mahwah, NJ: Erlbaum.
- James, R. N., and Sharpe, D. L., 2007,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U-shaped charitable giving profile”,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6(2): 218-238.
- Kidd, A., 2002, “Civil society or the state?: Recent approaches to the history of voluntary welfare”, *Journal of Historical Sociology*, 15(3): 328-342.
- Kim, S. E., and Kim, Y. H., 2014, “Measuring the growth of the nonprofit Sector: A longitudinal analysi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5(1): 242-251.
- Larsen, C. A., 2007, “How welfare regimes generate and erode social capital: The impact of underclass phenomena”, *Comparative Politics*, 40(1): 83-101.
- Lee, Y. K., and Chang, C. T., 2007, “Who gives what to charity? Characteristics affecting donation behavior”,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5(9): 1173-1180.
- Marcuello, C., and Salas, V. (2001). “Nonprofit organizations,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private donations: Evidence from Spain”, *Public Finance Review*, 29(3): 183-207.
- Mesch, D. J., Rooney, P. M., Steinberg, K. S., and Denton, B., 2006, “The effects of race, gender, and marital status on giving and volunteering in Indiana”,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 Quarterly*, 35(4): 565-587.
- Musick, M., and Wilson, J., 2008, *Volunteers: A Social Profil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OECD, 2011, OECD "Together for better public services: Together for better public services: Partnering with citizens and civil society",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 Payne, A. A., 2001, "Measuring the effect of federal research funding on private donations at research universities: Is federal research funding more than a substitute for private donation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8(5/6): 731-751.
- Payne, A. A., 2009, "Does government funding change behavior? an empirical analysis of crowd out", 159-184, in *Tax Policy and the Econom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audenbush, S., and Bryk, A.,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2nd ed.), London: Sage Publication
- Roberts, R. D., 1984, "A positive model of private charity and public transfer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2(1): 136-148.
- Shulz, T., and Halfliger, U., 2007, "Welfare state development and volunteering: Analyzing social policy effects at the sub-national level in Switzerland", Paper presented at the CINEFOGO Conference, Berlin.
- Simmons, W. O., and Emanuele, R., 2004, "Does government spending crowd out donations of time and money?" *Public Finance Review*, 32(5): 498-511.
- Smith, M. J., 2010, "From big government to big society: changing the state-society balance", *Parliamentary Affairs*, 63(4): 818-833.
- Stadelmann Steffen, I., 2011, "Social volunteering in welfare states: Where crowding out should occur", *Political Studies*, 59(1): 135-155.
- Warr, P. G., 1982, "Pareto optimal redistribution and private char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1): 131-138.
- Weisbrod, B. A., 1975, "Toward a theory of the voluntary non-profit sector In a three-sector economy", 171-196, in *Altruism, Morality and Economic Theory*, edited by Phelp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Wilson, J., 2000, "Volunteer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215-240.

## A Multi-level Study on Volunteering and Giving - Local Public Social Expenditure and Individual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

**Jung, Jin-Kyung**

(Kwangwoon University)

**Song, Jeong An**

(Kwangwoon University)

We examined how public social expenditure and individual socio-demographic factors affect individual voluntary activities(volunteering, giving).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was employed to a nested data set with 37,648 individual subjects and 16 local governments in Korea. HLM analyses yield an insignificant direct effect of public expenditure to volunteering and giving, while individual factors all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m. Finally, this study discussed why public social expenditure factor does not have significant influence in this data, and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for promoting volunteering and giving.

Key words: public social expenditure, volunteering, giving, hierarchical linear model

[논문 접수일 : 15. 09. 14, 심사일 : 15. 10. 15, 게재 확정일 : 15. 12. 19]